

기고



이 선 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 얼마나 불평등할까...원인과 해법은?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그리고 그 주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

서울시가 올해 초 실시한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에 달했다. 이러한 숫자는 필자가 체감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각자의 주된 사회경제적 활동 영역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상대적 체감도가 높았다. 연령대별로,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20대와 30대는 일자리 문제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는

30대는 자산 형성의 문제에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50대와 60대는 사회 참여의 문제에서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는 부동산 등 자산 분야에서의 불평등이 압도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3.5%로 소득 불평등의 78.6%를 상회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주택 가격 폭등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도는 수치로 객관화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 수준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가 매년 발간하는 Global Wealth Databook의 통계를 이용해 국가

별 자산 불평등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지니계수는 0.7248(2013~2017년 5년치 평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한 42개 국가 가운데 16번째로 낮았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계량화한 대표적 지표로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는 일본, 호주, 이탈리아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브라질, 칠레와 같은 신흥 개발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다.

주관적 불평등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산 불평등 수준과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객관화한 불평등 수준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간극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우선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불평등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산물이라면 결과로서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자산의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이 근로소득을 한푼 두푼 모은 저축의 결과물이라면 자산 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회의 총량적 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개인이 기여한 만큼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면, 결과로서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수용도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과정의 공정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일례로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CPI는 OECD 36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하며 이 순위는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낮은 CPI 수준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성숙도나 소득수준에 비해 절차적 공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주로 주택가격 급등에 기인한다는 점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소유의 편중이나 자산가격 상승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

반면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의 주거비를 상승시키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평등은 단순히 각 가정의 금고의 크기에 그치지 않고 가계의 주거 불안정성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만큼 불평등에 따른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끝으로 자산 불평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별 사회안전망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위 그림에서 한국의 우측에는 조세를 통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자산 불평등도가 월등히 높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자산과 가족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처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에서 자산 불평등의 확대는 주거 불안정의 심화, 위험에 대한 대응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우려가 한국인이 유럽의 '정서적으로' 불평등 문제에 민감한 탓은 아닐 것이다. 과정의 불공정성, 주거의 불안정화,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한국에서 소득 격차나 자산 편중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달리 말해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자산 특히 주택가격의 안정화,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비상 탈출구 경량칸막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정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가정 내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화재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

간을 2곳 이상 확보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배란다 벽면에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상황에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로 이다.

이렇듯 소중한 시설물에 불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을 비치해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온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내 가정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

한 생각보다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 모두가 참여해 비상탈출 계획을 세우고, 대피훈련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 옥내소화전사용법 등을 익혀둔다면, 초기화재 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일을 잊지 말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임미란(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자원센터 1388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 ▲인광야교을상담센터 222-5666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주) 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